

2022년 (재)인천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2. 3. 14. ~ 3. 25.일까지 (10일간) (재)인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17건(본처분 16건, 현지처분 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췌한 수범사례 3건을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내역

총괄현황			처 분 현 황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본처분	현지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권고	계	추징·환수	추 급	훈계
17	16	1	16	7	6	3	6/1,058	5/960	1/98	1

2022년 (재)인천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

【수범사례】

능력중심 채용모델 활용 우수 기관 선정

○ 2021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중심 채용모델 우수사례 기관 선정

□ 개 요

- 기 간 : 2021. 9. ~ 12.
- 주 관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대 상 : 직무능력중심 채용체계 구축을 희망하는 기관
- 참 여 : 국방기술품질원 등 212개 기관
- 선 정 : 울산항만공사 등 10개 기관

□ 추진실적

- 2021. 9. 1. : 능력중심 채용모델 활용 지원 신청 안내 공고
- 2021. 9.10. : 참여신청서 제출
- 2021.11.26. : 우수사례 기관 선정
- 2021.12.28. : 우수사례집 발간
- 2022. 1.13. : NCS 홈페이지 채용 우수사례 게재

□ 주요내용

- 채용투명성 향상을 위한 능력중심 채용모델 도입.운영(2019년~현재)
 - 본부장 및 센터장을 개방형직위로 채용
 -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및 발표 면접을 통한 직무역량 평가체계 구축
 - 블라인드 채용 고도화 : 인적사항 기재 최소화 및 직무 관련 교육훈련, 경험(경력) 자격 요구

□ 기대효과

- 능력중심채용 도입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형 복지 실현에 기여

긴급돌봄사업

- 코로나19 및 긴급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지원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현 황

-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다양한 지역사회 위기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계가 함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코로나-19 유행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종사자 또는 가족 확진 등 가정 및 시설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여 체계적·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필요

□ 추진실적

- '21년 긴급·틈새돌봄 종사자 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인원	횟수	시간
계	503	3,103	4,086
긴급돌봄	371	2,418	2,245
틈새돌봄	132	685	1,841

- '21년 긴급돌봄지원단 인력풀 구성: 총 74명(전임 44명, 겸임 30명*)
*대체인력지원센터, 종합재가센터 돌봄인력
- '21년 긴급돌봄지원단 인력풀 대상 교육: 총 6회, 70명

□ 주요성과

- 보건의료와 연계한 인천특화형 긴급돌봄지원단 구성
 - 목적: 간호 특화형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원 및 기술 지원 협의
 - 일시 및 장소: 21.2.3(수), 13:00 / 인천광역시 2층 공감회의실
 - 긴급돌봄지원단 협약 기관
 - 보건의료계(7개):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 의료원
 - 복지계(4개):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공동모금회, 교육청

○ 긴급돌봄지원단 인력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종사자 활동의 현실적 보상을 위한 노력
 - 인천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활동비, 원거리 파견시 교통비 지원
 - 중증 환자 돌봄 등의 높은 업무강도에 따른 전문직 수당 신설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안전물품 배포
 - 인력풀 대상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응급처치, 방호복 착용) 교육 필수 이수
 - 파견 전 인력풀 대상 개인보호구(방호복 및 안전물품) 배부

○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긴급돌봄지원단 인력풀 확보

- 비대면 방식을 통한 인력풀 면접 진행
 - 코로나19확산 방지 및 신속한 진행을 위해 면접 운영방식 변경
- 긴급돌봄지원단을 통한 인력풀 모집 홍보
 - 협약기관인 인천시간호조무사협회를 통해 인력풀 모집을 통해 전문 인력 확보(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21명)

□ 기대효과

- 보건·복지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돌봄 안전망 구축 도모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복지 실현

□ 진행사진

	
긴급돌봄지원단 협약식	긴급돌봄지원단 협약식
	
긴급돌봄지원단 교육	긴급돌봄지원단 교육

인천형 장애인 지원주택사업

- 인천광역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정책 수행을 위해 장애인들이 정착할 주거공간 수요 증대
-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공급을 통해 안심하고 탈시설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현 황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은 장애인 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
- 인천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과제 중 ‘주거가 확보되는 인천’을 추진 중
- 현장에서는 주거공급과 함께 안심하고 시설을 나올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요구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주거전환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추진실적

- 인천시.LH인천지역본부.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업무협약: ‘21. 8.
- 장애인 지원주택 8호 공급 및 입주자 모집.선정.계약진행: ‘21. 10.
- 인천형 장애인 지원주택 1호 시작: ‘21. 11. / 8호
-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확대를 위한 추가 수요조사: ‘21. 11. / 2회, 54호 주택공급 요청

□ 주요성과

- 인천광역시, LH,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고유역량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인천형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 기반 마련
- 장애인 지원주택(1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장애인 지원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 기존의 장애인 주택공급과 달리 교통의 편리성과 병원 등 주요 시설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공급되어 입주자의 높은 만족도

□ 추진계획

- 장애인지원주택 서비스 전담인력 채용 : '22. 1.
- 장애인복지관과 주거전환 네트워크 구축 : '22. 2
- 장애인지원주택 2차 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공급 협의(LH) : '22. 2~3

□ 기대효과

- 주택공급과 맞춤형 지원서비스 결합으로 실질적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실현

□ 진행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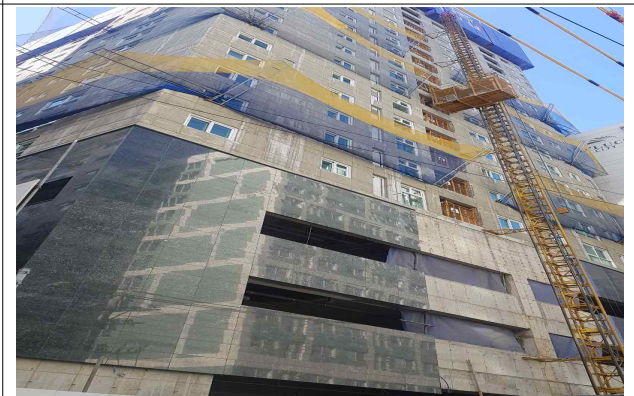
공급주택지 방문



업무협약식



입주 계약 사진



2차 공급주택지 방문

2022년 (재)인천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 권 고

제 목 자체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정관」을 포함하여 36개의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규정 관련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 III.주요항목별 편성기준, 3.성과급제도에 따르면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ceiling)한도 내에서 근무 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하며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단 「보수규정」 제18조(성과급)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은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맞추어 등급 간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인원수를 배분하여 개인 별로 차등지급 하도록 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따로 정해놓지 않고 내부계획을 수립하여 원장 결재를 득하고 2020년 ~ 2021년 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고 등급 간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인원수를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1]과 같이 직급별 2등급 내지 4등급으로 차등 지급 하였다.

또한 등급별 지급률을 성과급지급계획 내부결재 시에도 결정하지 않고 등급별로 인원을 결정 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여 [표1]과 같이 2021년도 B등급의 지급률 41%가 2020년도 C등급의 지급률보다 낮고 2021년도 S등급의 지급률 160%가 2020년도 B등급 지급률과 동일한 지급률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표1] 2020년 ~ 2021년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명)

기관명	구분		경영평가 등급 (지급률)	지급 총 인원수	등급별지급률(%)							
					S(가)		A(나)		B(다)		C(라)	
					지급률	인원수	지급률	인원수	지급률	인원수	지급률	인원수
2020년	CEO		다(133%)	1								
	직원	1급	다(138%)	1	204%	-	180%	1	160%	-	50%	-
		2급		3		-		-		1		2
		3급		4		1		-		-		3
		4급		8		2		2		1		3
		5급		3		1		1		1		-
		6급		3		-		3		-		-
		전문직		6	160%	1	145%	2	120%	2	47%	1
		합계		28	17.9%	5	32.1%	9	17.9%	5	32.1%	9
2021년	CEO		라(57%)	1								
	직원	1급	라(78%)	1	160%	-	100%	-	41%	-	11%	1
		2급		4		1		-		1		2
		3급		6		3		1		-		2
		4급		11		2		5		2		2
		5급		7		2		3		-		2
		6급		7		-		5		1		1
		전문직		5		-		3		2		-
		합계		41	19.5%	8	41.5%	17	14.6%	6	24.4%	1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대상, 제외대상, 지급등급별 인원, 지급률 등의 지급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기준에 맞추어 공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 징계의 효력 관련

재단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효력) 따른 징계의 효력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신분을 해제하고¹⁾,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정직은 1월에서 3월 이하의 기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징계기간 중의 보수는 「재단 보수 규정」 제17조(징계기간 중의 보수지급)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을 [표3]과 같이 적용하지 않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표3]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종류	임용제한	직무제한	보수
파면	5년간	-	-
해임	3년간	-	-
강등	-	3개월간	전액삭감
정직	-	1월~3월	전액삭감
감봉	-	1월~3월 (직무종사)	1/3 삭감
견책	-	-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임원 결격사유 관련

재단에서는 정관 제8조(추천위원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임원의 후보(당연직이사, 당연직감사 제외)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자격기준 및 제출서류)에서는 임원후보로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별표1]로 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필수요건으로 하였다.

1) 「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나 재단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보다 [표4]와 같이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표4] 임원 결격사유 비교 내역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자 - 재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p>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p> <p>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p> <p>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재단설립일 유급휴가 인정관련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급휴일을 운영하면 그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유급휴일을 사용한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유급휴일에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유급휴일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해당 금액만큼 운영에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재단은 「복무규정」 제21조(휴일)에서 재단 설립 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 기간까지 확인한 결과 연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재단 설립 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개선] 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로기준법」에 상충하는 징계의 효력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재단 설립 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하시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소속임직원 외부강의 등 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 ▼▼▼▼, ▼▼▼▼, ☼☼☼☼, ♣♣♣♣, ♠♠♠♠, □□□□, ◆◆◆◆, ○●○●

내 용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표1]과 같이 2021년~2022.2월 기간 동안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칙」(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외부강의 등 활동을 수행하였다.

[표1] 임직원 외부강의 등 수행 현황

(단위: 명, 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월까지	비고
인원	4	24	6	
횟수	5	94	14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외부강의 등 신고 지연

건전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

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른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재단의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²⁾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단에서는 2021년~2022년 2월 기간 동안 총 16명의 임직원들이 3회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면서 1일 ~ 101일까지 지연신고를 하거나 총 3명의 임직원들은 3회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였다.

2. 외부강의 등 횟수초과 수행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제7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단의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단에서는 2021년 ~ 2022. 2월 기간 동안 총 2명의 임직원들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면서 [표2]과 같이 그 횟수가 월 3회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재단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후에 신고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2) 「공무원 행동강령」개정(2020.5.27.)이전: 2일 이내 신고,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칙」 개정(2021.1.14.): 10일 이내 신고

[표2] 임직원 외부강의 등 월3회 초과활동 내역

(단위: 원, 회)

부서	성명	요청-기관	요청사유	일시(시간)	장소	대가	사전신고 여부	횟수
-	김민준	-	-	2021-12-10 (13:00~18:00)	-	-	사전	4회
		-	-	2021-12-17 (09:20~10:50)	-	-	사후 (10일 이내)	
		-	-	2021-12-20 (15:00~17:00)	-	-	사전	
		-	-	2021-12-22 (14:00~18:00)	-	-	사후 (10일 이내)	
-	김민준	-	-	2022-02-12 (16:30~18:30)	-	-	사후 (10일 이내)	4회
		-	-	2022-02-07 (13:00~15:00)	-	-	사후 (지연신고)	
		-	-	2022-02-14 (13:00~15:00)	-	-	사후 (10일 이내)	
		-	-	2022-02-19 (13:00~15:00)	-	-	사후 (10일 이내)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주의] 외부강의 등 활동 수행 시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훈계) 요 구

제 목 소속 직원 복무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4판)」(이하 ‘복무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에서는 소속 직원 ☞☞☞에 대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총무과-△△호, 0000.00.00.)에 따라 휴가, 재택근무 등 대상자 30%이상 의무시행을 위하여 근무조를 편성하고 대상자는 0000. 00. 00. ~ 00. 00. 00.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수행하였다.

[표1] 소속 직원 대상자 현황

부서	성명	직급	최초임용일	현부서 임용일	담당업무
☞☞☞☞	☞☞☞	-	-	-	■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복무관리 지침 II. 공직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3.재택근무 할 때에 따르면 재택근무 등 원격 근무 시 보안유지 및 복무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 V. 유연근무제 5. 유형별 운영지침 나. 원격근무제에 따르면 원격근무는 1주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고 실시 전일까지 신청하며 스마트워크근무형³⁾의 경우,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근무자의 당일의 업무실적 및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무관리 지침에서도 재택근무시 업무전화 착신전환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부서장은 매일 재택근무자가 수행한 업무결과와 함께 건강상태 등 코로나 19 관련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예규에 따르면 원격근무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재단에서는 0000. 00. 00.(목)부터 외부에서 메신저 및 재단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내메일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① 재택근무는 사전신청 ② 업무계획은 전날 또는 당일 09:00전까지 서면 또는 메일로 신청 ③ 업무결과 보고는 당일 18:00이후 또는 익일 09:00이전에 수행하도록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소속직원 ■■■은 0000. 00. 00. ~ 00. 00. 기간 동안 16일의 재택근무를 수행하면서 0000.00. 00. 수행한 재택근무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재택 근무에 따른 업무계획은 사전 및 당일의 업무실적은 늦어도 익일에 보고하고 부서장은 이를 확인해야 함에도 재택근무일 중 1일은 업무계획 보고를 하지 않거나 3일은 10일~16일을 지연하여 보고하고, 업무실적보고 중 7일은 1일~13일 지연 처리하였다. 심지어 3번의 업무계획 보고는 업무실적보고 보다 늦게 보고 하는 등 다수의 재택근무 복무사항이 부적정하게 이루어 졌다.

3) 기본개념: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출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조치할 사항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주의] 원격근무에 따른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복무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재)사회서비스본부(☞☞☞☞)

☞☞☞☞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 □□□□, ▼▼▼▼, ■■■■, ♠♠♠♠, ♣♣♣♣, ♠♠♠♠

내 용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재무회계 규정」 제79조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계약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재단은 2019. 2. 1. ~ 2022. 2. 18.까지 총 10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감사기간 현재까지 공개한 계약정보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1]과 같이 ‘입찰 공고의 내용’ 및 ‘계약체결의 현황’ 만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그 밖의 계약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표1] 계약정보 공개 현황

총 계약 건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계약 변경	검사현황	대가 지급현황
104건	×	○	×	○	×	×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6장 제2절 제2(선금 지급대상)에 따르면 선금 지급대상 범위에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1.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2.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한편 예규 제6장제2절제4(채권 확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때, 선금에 대한 보증·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예규 제6장제2절제5(선금의 사용과 정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금 지급대상 충족 여부 및 지급범위, 선금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내부 보고(결재) 등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선금지급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지급 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함으로써 선금 지급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 기간 중 재단이 지급한 선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2]와 같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면서 선금지급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내부검토를 하지 않고 선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 상대방에게 선금지급 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선금의 지급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선금 적정성 검토 및 지급조건 통보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명	계약금액	선금금액	선금지급일	적정성 검토	지급조건 통보
1	-	19,800	9,000	2020.11.20.	×	×
2	-	21,340	10,670	2020.12.01.	×	×
3	-	14,250	9,975	2021.02.10.	×	×
4	-	20,500	10,250	2021.03.30.	×	×
5	-	98,000	49,000	2021.05.25.	×	×
6	-	18,600	9,300	2021.07.16.	×	×
7	-	20,680	14,476	2021.07.29.	×	×
8	-	13,300	9,310	2021.11.10.	×	×
9	-	50,000	25,000	2021.11.18.	×	×
10	-	49,500	24,750	2021.12.21.	×	×
11	-	50,000	25,000	2021.12.30.	×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표3]과 같이 선금 보증 종료일을 규정과 달리 사업 이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미만으로 산정하여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확인 및 보완요구 없이 선금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홍보영상 제작’ 계약 건의 경우 2021년 3월 30일에 선금을 지급한 이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선금 보증서의 보증 종료일이 도래되기 이전에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확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3] 선금 채권확보 소홀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금지급일	보증서 보증기간	비 고
1	-	2021.03.08. ~ 2021.11.30. (변경후 2021.12.29.)	20,500	2021.03.30.	2021.03.24. ~ 2022.01.29.	
2	-	2021.07.23. ~ 2021.09.28.	20,680	2021.07.29.	2021.07.28. ~ 2021.07.31.	
3	-	2021.12.07. ~ 2022.05.20.	49,500	2021.12.21.	2021.12.09. ~ 2022.05.20.	감사기간 중 조치 완료
4	-	2021.12.23. ~ 2022.04.29.	50,000	2021.12.30.	2021.12.23. ~ 2022.04.29.	감사기간 중 조치 완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하자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제2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예규 제13장 제10절 “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이하 ‘하자만료검사’라 한다.)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증서를 청구하는 등의 적절한 채권을 확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 또는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검사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은 [표4]와 같이 하자담보 책임이 있는 공사 계약 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정기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4] 하자검사 대상 현황

연번	계약명	담보책임 존속기간		정기하자검사	하자만료검사
		보증시작일	보증종료일		
1	-	2020.07.25.	2021.07.24.	미실시	미실시
2	-	2020.08.25.	2021.08.24.	미실시	미실시
3	-	2020.12.03.	2021.12.02.	미실시	미실시
4	-	2020.12.26.	2021.12.26.	미실시	미실시
5	-	2020.12.30.	2021.12.29.	미실시	미실시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선금보증서의 보증 종료일이 미도래한 계약 건에 관하여 감사기간 중 선금금 보증기한을 연장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② 선금 지급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을 검토하여 내부 보고(결재)를 통하여 지급 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선금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지급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 ③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시행·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 ◆◆◆◆, ◎◎◎◎, ◆◆◆◆, ●●●●, ▤▤▤▤,
▣▣▣▣, ●●●●, ▨▨▨▨, ♣♣♣♣, ▩▩▩▩, ▧▧▧▧, ▦▦▦▦,
▢▢▢▢

내 용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물품관리규정」 제8조(물품관리자의 의무)에 의하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물품수급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규정」 제11조(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재단은 물품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 한 번도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다.

2.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규정」 제10조(장부비치) 및 제14조(물품의 관리)에 따라 물품관리자는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업무전산화에 따른 전산출력물로 갈음 가능)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품목별, 회계별로 분류하고 부여된 물품분류번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24조(물품의 출납) 및 제28조(보관의 원칙)에 의하면 물품 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은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품을 수령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동시에 관계 장부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시설 내에 물품의 식별과 보관 수량의 확인을 용이하도록 물품분류 순으로 보관하며,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 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서 취득한 물품 등록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서비스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재물조사 시에만 취득 물품에 대하여 대장에 등록하는 등 물품 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과 ■■■■■에서는 구입물품 자산취득에 대한 사항은 비품대장, 교구 관련 구입사항은 교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구청 지도점검에서도 자산관리에 관하여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에 대한 판단]

의견을 제출한 2개의 시설 외에는 재물조사 시에만 취득 물품에 대하여 대장에 등록하는 등 물품 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주의]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물품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취득한 물품 등록 등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처리 소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 ■■■■, ◎◎◎◎, ▨▨▨▨, ▤▤▤▤, ▩▩▩▩, ▦▦▦▦, ◆◆◆◆, ▯▯▯▯, ♣♣♣♣, ♠♠♠♠

내 용

1.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본부 등 16개 시설에서 총 ○○장의 신용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법인카드에서 총 580,382포인트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에서만 포인트 세입 완료하였으며, 그 외 본부 및 시설에서는 카드 발급 일부터 발생된 559,741포인트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다.

2.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세입조치 소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의 원칙(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출연금, 출자금, 이월금 등, 세출예산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예비비, 기본재산 적립, 보조금 반납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이자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재단 본부 등 16개 시설 공공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중 〰〰〰〰등 2개 시설에서 [표1]과 같이 총 107,772원의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

[표1] 예금이자수입 발생 미처리 현황

(단위:원)

관리부서	회계연도	발생이자	비고
계		107,772	
-	2021	48,400	
-	2021	59,372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 〰〰〰〰, 〰〰〰〰〰〰, 〰〰〰〰에서는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에 대하여 사전고지 받지 못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년 세입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시정]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559,741점과 예금이자수입 107,772원에 대하여 세입 조치 하시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수당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 ◆◆◆◆

내 용

1.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보수규정」 [별표1] 부가급여 지급기준에 의하면 가족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며,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⁴⁾(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⁵⁾(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5)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가족수당은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또한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신분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자녀 출생에 따른 가족수당에 대하여 사유 발생 날이 속하는 달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표1]과 같이 소급 적용하지 않거나 출생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표1] 출생에 따른 가족 수당 지급 미지급 현황

(단위:원)

신청자	가족수당 대상자	지급사유 (발생일)	적정 지급액	기지급액	미지급액	비고
●●●	첫째 자녀(■■■■)	출생(2021.02.23)	80,000	0	80,000	2021년 2월~5월분
▲▲▲	둘째 자녀(▣▣▣▣)	출생(2020.07.11.)	60,000	42,000	18,000	7월분 일할계산 분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2]와 같이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전액을 지급하였다.

[표2] 가족수당 소급 적용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원)

신청자	가족수당 대상자	지급사유 (발생일)	적정 지급액	기지급액	오지급액	비고
♠♠♠	배우자(●●●●), 자녀(◆◆◆◆)	신규채용 (2020. 8. 10.)	42,580	60,000	17,420	2020년 8월 분 일할계산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직책수당에 관한 사항

재단 「보수규정」 [별표1] 부가급여 지급기준에 의하면 원장, 본부장, 실장에 대하여 해당 직책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직책수당을 지급받는 직원 및 당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직책수당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재단에서는 [표3]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직책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중복 지급하였다.

[표3] 직책수당 중복 지급 현황

(단위 : 원)

대상자	직책수당 지급액 (지급기간)	시간외수당 지급액 (지급기간)	중복지급액	비고
○○○○	400,000 (2021.6월분)	226,440 (2021.06.25.~06.30)	79,990	2021.06.25.~30 직책수당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시정] 미지급된 가족수당 98,000원을 지급하시고, 과다 지급 된 가족수당 17,420원, 중복 지급 된 직책수당 79,990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등 관계 규정 및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 ▲▲▲▲, ○○○○

내 용

1.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 미수립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업무추진비 연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하였다.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제3조 관련)> 중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에 따르면 축·부의금품의 지급 대상 범위는 결혼 또는 사망이며,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 위 내에서 업무 연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관기관⁶⁾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

하고, 소속 상근직원⁷⁾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소속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재단에서는 경조사비 대상이 아닌 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별표1] 해설에 의하면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에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는데 서비스원에서는 상근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집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일반 의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으나 집행하였다.

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생일 기념품, 불우 직원 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나, 재단에서는 중간관리자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 등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6)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함
7) 상근직원은 관련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음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 ▲▲▲▲, ◎◎◎◎

내 용

1.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규정집」 보수규정 제27조에 의하면 임원 및 직원의 국·내외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 항목은 근무지내 국내출장과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구분된다. 근무지내 국내출장은 1만원, 2만원 정액이며, 근무지외 국내출장은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한다.

관외출장 시 일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동일한 날짜에 여비를 이중 지급하고, 공무와 관련 없는 관외 출장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2. 관내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른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때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표1]과 같이 여비 지급 시간 및 관용차량 이용 기준에 맞지 않게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관내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원)

일시	대상자	출장시간	출장지	출장사유	관용차량 이용여부	지급 여비	적정 지급액	비고
2019.01.25	◇◇◇	12:00~15:00	-	-	×	20,000	10,000	4시간 미만
2019.02.08	◆◆◆	14:30~17:00	-	-	×	20,000	10,000	4시간 미만
2019.04.29	□□□	13:00~16:00	-	-	×	20,000	10,000	4시간 미만
2019.10.16	■ ■ ■	16:00~18:00	-	-	○	10,000	0	관용차량 이용
2020.05.08	△△△	14:00~17:00	-	-	×	20,000	10,000	4시간 미만
2020.09.02	▲▲▲	13:00~18:00	-	-	×	40,000	20,000	중복 지급
2020.09.09	▽▽▽	13:00~17:00	-	-	○	20,000	10,000	관용차량 이용
2020.12.01	▼▼▼	14:20~17:20	-	-	×	30,000	20,000	오지급
2020.12.03	♠♠♠	10:10~12:00	-	-	×			
2021.05.12	♣♣♣	11:30~15:30	-	-	○	20,000	10,000	관용차량 이용
2021.06.29	♠♠♠	16:00~18:00	-	-	×	20,000	10,000	4시간 미만
2021.08.26	♣♣♣	16:00~18:30	-	-	×	20,000	10,000	4시간 미만
2021.08.26	●●●	16:00~18:30	-	-	×	20,000	10,000	4시간 미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시정] 오지급된 여비 166,660원을 환수 조치하시고, 관계 규정에 대한 충분한 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 개 선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 □□□□, ▼▼▼▼, ◎◎◎◎, ♣♣♣♣

내 용

1. 관서업무비에 관한 사항

(1) 관서업무비 예산 편성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관서업무비는 정원가산업무비와 부서업무비로, 정원가산업무비는 법인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격려, 생일기념품, 불우직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집행하는 예산이며, 부서업무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 ♣♣♣♣ 및 ♣♣♣♣에 관서업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에서는 관서업무비 예산 편성 시 정원업무가산비에 포함된 동호회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

(2) 관서업무비 집행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원가산업무비는 법인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격려, 생일기념품, 불우직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집행하는 예산으로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정원이 100명 미만으로 1인당 연간 기준액은 80,000원이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정원가산업무비를 집행함에 있어 1인당 연간 기준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예산은 세입 및 세출 예산 과목에 맞게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은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정원외의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목록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는 지급임차료로, 청사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비, 방역소독비등은 지급수수료로 편성·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업무 관련 인쇄비, 승차권제작, 정기간해물 구독, 도서구입비는 도서인쇄비로,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는 지급임차료로, 청사청소 용역 및 경비용역비, 방역소독비등은 지급수수료로, 기관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 운영비편성·지출하여야 하나 재단에서는 세출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주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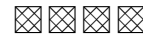




[개선] 예산 편성 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수립하여 주시고 2022년도 부서업무비 과다 편성 부분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구

제 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 ●●●●, ☼☼☼☼, ♣♣♣♣, ◆◆◆◆, ●●●●, , , , , , , 

내 용

1.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⁸⁾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 방법,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12.13.14호 생략 가능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그러나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비롯한 산하 운영 시설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재단 및 ☞☞☞☞ 등 4개 기관(시설)에서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게시하고, ■■■■에서는 운영규칙 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일부 내용만 기재하였으며, 나머지 12개 시설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아닌 ‘개인정보 취급방침’으로 게시 되고 있으며 제5조 위탁업무별 관리부서,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보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등 관련 정보가 현행화 되지 않았고,

☞☞☞☞ 및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회원가입 시 이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내용이 게시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현행화 되지 않았다.

또한 ■■■■■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담당자 및 연락처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다.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징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징구 없이 신규기관 등록사전 교육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기재토록 하여 제출받았고,

■■■■ 운영규칙 ‘Ⅲ. 보호서비스 규칙, 제3장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 수집하는 개인정보 파일 현황에 관련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소홀히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은

- [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및 현행화하시기 바라며,
- ② 동의서 징구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관련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직원 업무연찬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③ ♣♣♣♣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없이 진행된 교육신청 건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하시고 ■■■■에 대해서는,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④ ■■■■에 대해서는, 수집하는 개인정보 파일 현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운영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 ◎◎◎◎, ▼▼▼▼, ▽▽▽▽, ◆◆◆◆, ●●●●,
☒☒☒☒, ☐☐☐☐

내 용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4개의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 운영규칙 미제정

재단 ‘시설 및 수탁·대행 사업 운영 규정’ 제7조(운영 규칙 등의 제정)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수탁·대행 사업의 소관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과 수탁·대행 사업의 운영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 ◆◆◆◆ 등 2개 시설은 운영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2. 안전관리지침 및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 운영규칙 제73조(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시설장은 시설의 안전관리와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대비 대응체계 구축, 안전점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정하여야 하나 ☒☒☒☒에서는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의 특성(직원 수, 시설환경,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설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3. 어린이집 공제회 공제증권 미갱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1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 , 에서는 매년 2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증권을 계약기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나 2000년 00월 0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갱신을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관련

●●●●는 연간 안전관리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아, 향후 시설 안전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 어린이집 공제회 공제증권 미갱신 관련

안전공제회 공제증권 가입이 2021년까지는 수기신청이었으나 2022년부터 시스템화하여 전산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변화함에 따라 시군구의 승인절차를 거쳐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구청 담당자와 여러 차례 유선으로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 담당자 연가, 출장,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며 추후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은

- [시정] ① 재단 규정에 따라 운영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 ◆◆◆◆에 대해 운영 규칙을 제정하시고
- ② ■■■■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지침 및 안전관리계획을, ●●●●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시고
- ③ ▨▨▨▨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증권을 즉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정보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험·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2022년 1회 〇〇〇〇〇〇〇〇 직원 채용 면접심사 일정 안내(〇〇〇〇〇〇〇〇-229, 2022.1.26.) 등 총 65건의 문서에서 면접심사위원을 공개하는 등 심사의 문건을 심사 전에 ‘비공개문서’로 관리하지 않고 ‘공개문서’로 등록하였다.

또한 같은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〇〇〇〇〇〇 인건비 지급(●●●●-71, 2021.12.28.) 등 총 30건의 문서에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비공개문서’로 관리하지 않고 ‘공개문서’로 등록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은

[시정]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비공개문서’로 변경
하시고, 비공개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 업무연찬 및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관 계 부 서 ◇◇◇◇, ☼☼☼☼, ♣♣♣♣, ●●●●, ▣▣▣▣▣▣, ☆☆☆☆

내 용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산하 운영시설 등에서는 [표]와 같이 재단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총 6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1. 웹접근성 지침 적용 미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 따르면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2015.3.31.)을 수립·배포함에 따라 웹 사이트 개발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화된 웹 접근성 부문의 표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 및 산하 운영시설에서 운영하는 6개 사이트를 웹 접근성 진단 도구로 검사한 결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지 아니한 항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2. 홈페이지 운영 관리 소홀

가. 보안서버 미구축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 ㉤㉥㉦㉧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보안서버 구축 없이 운영되고 있다.

나. 비밀번호 작성규칙 미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을 포함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으로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의 문자를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의 문자를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 및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안전한 비밀번호 생성을 위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다. 회원탈퇴 기능 미제공

■■■■■■■■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3조를 보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수 있고, ♣♣♣♣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회원가입 이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 및 ♣♣♣♣ 등 두 시설 홈페이지는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회원 탈퇴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에서는 2022년 4월 홈페이지 리뉴얼 시 웹 접근성 등 지적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며 ♣♣♣♣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웹 접근성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미준수사항을 수정할 계획이고,

♣♣♣♣은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적용’ 부분은 즉시 반영하였으며 4월 중 나머지 미진사항을 반영할 계획이고, ●●●●은 2022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웹접근성 지침 적용 및 운영 미비사항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4월 중으로 웹접근성 지침 적용 및 운영 미비사항을 수정할 것이며, ☆☆☆☆는 웹 접근성 관련 지적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의견에 대한 판단]

웹 접근성 지적사항에 대해 4월 중으로 수정을 완료할 것으로 의견을 전달한 재단 및 시설의 홈페이지를 2022년 5월 재확인한 결과 지적사항 대부분이 수정 되었으나 일부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추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은

- [시정] ① 재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라 개편하시고,
- ② ○○○○, □□□□□□□□ 홈페이지의 안전한 인증정보 송·수신을 위해 보안서버를 구축하시기 바라며,
- ③ ☞☞☞☞, ○○○○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및 비밀번호 변경 시 비밀번호 작성규칙에 맞게 적용되도록 조치하시고,
- ④ □□□□□□□□, ☞☞☞☞ 홈페이지의 회원탈퇴 기능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